

“집중호우 인명피해 예방에 행정력 총동원”

도, 군산 배수펌프장·상습침수지역 찾아 대응태세 점검… 기상특보 발효 시 선제적 통제·대피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9일까지 도내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8일 군산시 경포천 배수펌프장과 나운동 상습침수지역을 찾아 재해취약시설과 주민대피체계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집중호우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우 취약시설의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배수시설 운영과 주민대피체계 등 재난 대응 전반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경포천 배수펌프장의 비상가동 준비상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나운동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침수 위험요인, 주민대피계획, 위험지역 통제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빗

물받이 등 호우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유관기관에 위험징후 발생 시 선제적인 출입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모든 전달수단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대응태세를 재차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과 협력해 구축 중인 AI 기

반 도시침수 대응 솔루션을 활용해 침수 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에 강화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철저한 사전예찰과 신속한 통제, 선제적 주민대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광역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전북자치도, 대규모 원전사고 대비 광역 현장지휘 거점 구축

전북자치도는 8일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광역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새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 광주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지진과 지진해일, 다수회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영광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광역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지휘와 기관 간 협업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한빛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상비사태 대응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새출발을 함께했다. 교육, 주민보호훈련,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천과 같은 합동훈련과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방사능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법률 위임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반영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강화 적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조기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제

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적용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은 법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더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기업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신속히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투자촉진, 시장 현대화사업,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내장비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 투자의 지역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해 도민의 세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매물 광고 삭제 기준 합리적 개선

계약 완료 통보 3일 이내 광고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고의적인 소비자 유인 허위광고, 종전과 같이 250만원 벌금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9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 행위를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알 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임의이나 상충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완료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단순 실수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해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허위·미끼광고 행위는 새롭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됐다. 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고의적인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

침이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실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된 기준을 숙지에 주시고, 도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도, 미래 도서관 이끌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시시대 대응사서·도서관 담당자 역량 강화… 실무 중심 전문교육

전북특별자치도는 AI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공공도서관 사서와 도서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처음 개설된 이후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총 1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군산비빔도서관과 군산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

△이보라 신라대학교 교수의 ‘시시대 사서와 공공도서관 조직의 변화’ △남원대도서관의 지역자료 아카이브 운영 우수사례 현장 견학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서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우수 운영사례를 현장에 확산해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도서관 전문인력의 역량은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지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철자(1960. 4. 11.생 2026. 5. 25. 사망)의 상속인 카반반래리블이는 전주지방법원 2026. 6. 24. 362호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망인에 대한 채권 또는 유증을 받은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주소로 그 채권 또는 유증의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6. 6. 24. 362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최영철

▶피상속인: 망박철자(1960. 4. 11.생 2026. 5. 25.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87-14, 305호 (태평동)

▶공고안 카반반래리블이

▶상속한정승인수리말: 2026. 7. 2.

▶공고기간: 2026. 7. 8. ~ 2026. 9. 7.

▶주소: <청구인 상속인>카반반래리블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59. 106동 1703호 (평화동 2가, 호반라센빌)
연락처: 010-5444-7484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